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서 교육부 제출

서남학원 이사회 예수병원 컨소시엄·명지의료재단 제출 계획서 모두 승인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이사장 문영기)는 지난 24일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2개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서남학원 이사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주예수병원 컨소시엄과 명지의료재단 등 2곳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심의, 2곳의 계획서를 모두 승인하고 이

를 교육부에 제출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26일 이사회에 따르면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A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재정기여금으로 현금 200억원과 부동산 22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지의료재단도 기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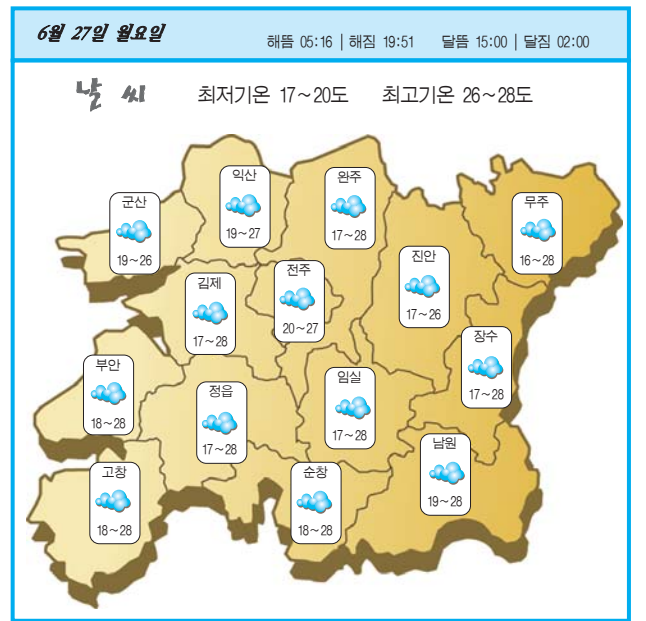
제출했던 정상화계획서의 재정 확보 부분을 보완한 계획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24일 교육부에 2개의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제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았다.

한편, 서남학원 이사회는 앞서 지난 7일 서남대 구 재단 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비리 재단에 학교를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구 재단의 범죄와 다름없는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하고 임시이사회를 통한 정상화 추진주체의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 완주 상생협력사업 조례안 폐기 안전 처리 보류

가결시 완주 노인들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금지·승화원 이용비용 높아져 갈등 불거질 것 등 고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만든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조례안 폐기 안전 처리가 보류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 안전을 의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무산된 뒤 전주시의회에서 완주군민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 폐기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완주군이 35사단 전주대대(예비군)의 완주군이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갈등이 증폭돼왔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 내외부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 하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제기돼 왔다.

보류는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차후 회기로 넘기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완주군 노인들의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이 금지되고, 완주군민의 전주시 화장시설인 승화원 이용비용도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져 시·군 통합이 무산된 뒤 수면 아래 잠복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의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개정조례안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일시적으로 미뤄졌을 뿐, 시·군 통합이 무산된 뒤로도 전주시가 완주군에 대해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사업에 대해 형평성을 물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들도 많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갑자기 내린 비 비가 내린 지난 24일 오전 어느 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우산 없는 시민과 아이들이 달리고 있다. 이날 전북지역 전역에 비가 내렸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은 완주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통합이 무산된 마당에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우선 당장 필요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힘을 얻게 될 경우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새로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영재 기자

도, 전북출신 위원들과 협력 논의

전북도가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위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위원 18명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의 핵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정책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위원회에 포진한 인사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이뤄졌다.

현재 25명의 인사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는 ▲성장동력 발굴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풍수해 보험료 국비 상향지원 건의 ▲삼락농정 추진사례의 홍보 및 지원 ▲익산고도 지구 추가 확대 지원 협조 등을 요청했다.

/정영수 기자

도교육청 4개 학교기업 선정 5,00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한국치즈과학고와 군산기계공고, 남원용성고, 진경여고 4개 학교를 학교기업으로 선정하고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학교기업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시작했다.

군산기계공고, 한국치즈과학고, 진경여고는 지난해에도 학교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남원용성고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치즈산업으로 유명한 임실군에 위치한 한국치즈과학고는 식품분야 특성화고로 지원돼 모짜렐라 등 신선치즈와 요거트 등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치즈과학고는 올 11월말 유가공제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남원용성고등학교 학교기업 '나무

창작회'는 목기로 유명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남원시와 협력해 옷칠 산업에 도전한다.

옷칠 갱반, 도마, 다용도 서랍장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용성고 학생 10명과 일반인 5명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기술 습득은 물론 남원시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출발을 할 예정이다.

목공예 동아리에서 출발해 우드 펜 등을 제작, 판매하는 군산기계공고 우도리는 학교기업 2년차를 맞이하며 올해는 품질 관리와 목공 선반 등 제품 다양화, 창업 교육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경여고는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현실을 고려, 수공예품과 향토 농산물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44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 총 40여억원을 지원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200개 중학교에 학생 규모에 따라 각각 800~4,700만원까지 총 4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중학교의 진로 탐색활동과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주선택활동 등을 돕기 위해서다.

도내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15개 학교가 1학기에 운영하고 지구 추가 확대 지원 협조 등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신규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간 정보 교환 및 학교 연수, 협의회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될 25개 자유학기제 거점학교에 1교당 150만원~4백만원까지 총 7,5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지원청 별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이용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